

# 법무부-대검 파국 막았지만 갈등 불씨 여전

윤석열, 추미애 지휘권 수용

### 중앙지검 '검언유착' 독립 수사 이달말 검찰 정기인사 예정 인사 폭 놓고 재충돌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내용의 대검찰청 발표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의사로 받아들여 파국로 향하던 법무부-대검 갈등은 1주일여 만에 잠잠해질 전망이다. 반면, 이달 말 검찰 인사 때 재충돌 가능성도 커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9일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 장관의 수사지휘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대검 발표 내용은 장관 지휘가 사실상 관철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전날 김영대(57·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이 수사팀을 포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는 절충안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곧바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대검은 전날 추 장관이 최후통첩을 하면서 고지한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전 추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파국을 막았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상실 상태가 이미 발생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서 2일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과 함께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1주일 동안 양측 간의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갈등이 고조됐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물러서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행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정진웅 형사1부장'의 기존 수사지휘라인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대검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련자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고심하다가 6일 만인 전날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해온 다수 검사장의 의견을 고려하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선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듯하지만 올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이어온 법무부와 대검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일시 휴전 상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총장의 측근 참모진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좌천됐다.

당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정취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정체를 검토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번 인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先 정보위원장·後 국회 부의장 선출”

### 민주, 통합당 국회부의장 고사 방침에 “절차따라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방침과 관련 부의장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48조3항에 따르면 정보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선출한다. 이때문에 정보위원 가운데 정보위원장을 선출하

기 위해서는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그러나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 부의장이 없어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나"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로 정보위원 선임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與 내부서도 부동산 정책 책임론

### 이낙연·홍익표 “국면 전환 필요”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낙연 의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정부도 경질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기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의 극심한 악화과 맞물려 당내에서 김 장관에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미 일제히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은 앞서서 결단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왜 결단 안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며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질론이 거론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장관 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전정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병훈, 산업현장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9일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파쇄기, 분쇄기, 절단기, 압축기 등의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방호망, 방책,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기계로부터 가해지는 위해에 대한 방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5월 22일에는 광주 남산단에서 폐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청소 도중 미끄러지며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기계·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



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 차단 장치와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안전장치의 설치를 지원하자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의 설비 구축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당, 다주택 의원 부동산 신속 처분 권고

### 소속 의원 39명 2주택 이상...시한 설정은 없기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내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매도 시한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대신 신속히 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주택 해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대상 의원들은 이를 수용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행 시기와 계획은 개별 의원이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4월 총선 때 약속한 '실거주용 1주택 서약' 이행 시기를 당초 2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각의 사정이 달라져 추가로 새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176명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한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분가나 처가 부모가

사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기에 전·월세를 놓는 등 당장 처분이 쉽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주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권고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체의 다주택 전수조사 결과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총선 후 보통등록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였다.

여기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탈당하고 양정숙 의원은 제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시민당에서 원내 당으로 돌아가 3명이 줄었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 의원 39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투기자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에는 실거주 외에 다른 주택은 2년 내 처분한다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N·B

Him e Bionz Solar Energy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